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바이오펀드는 깨끗한가?

벤처기업이 울상이다. 요즘 벤처기업이라면 하나같이 울상을 면치못할 것이다. 「대박」의 꿈은 온데간데없고 오늘내일을 꾸역꾸역 연명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음은 물론 재벌의 흉내를 내다 쇠고랑을 차게 된 벤처기업가, 아니 사이비 벤처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벤처라면 신물이 난다고 야단들썩이기 때문이다.

2000년은 아마도 벤처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벤처기업 몰락에 이르기까지 벤처로 보낸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로 벤처가 각광을 받았는가 하면 또 질시와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해였다. 벤처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호평받던 코스닥이 빈 쭉정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곤두박질치더니 드디어 「벤처게이트」로 불러도 좋은 정도의 흉칙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종막의 길을 걷고 있다.

벤처기업이란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그래서 「굴뚝산업」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존의 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것들을 창조하는 연금술을 가졌기에 99%의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의 「대박」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벤처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벤처를 창업하거나 벤처에 기대 한몫 잡아보려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굴뚝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실업률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벤처의 존립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금융적 지원을 과다하리만큼 제시하고 지원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 굴뚝산업을 모조리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새로운 산업 형성과 신경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였고, 또 절대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 자체를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존립기반이 취약한 벤처기업들에게 기존기업과 똑같이 경쟁하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1000에 하나둘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의 독점욕과 비효율성, 그리고 스스로의 경영잘못을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근근히 연명하는 뻔뻔스러움에 신물이 났기에 벤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지 특정 벤처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지원정책은 오류를 범하기 쉽고 나중에 탈이 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요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벤처기업 지원정책 자체가 아니라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벤처게이트」 문제도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사이비벤처의 뇌물을 받고 불법적으로 뒤를 봐주었다는데 있다. 벤처와 제3 금융기관이 짜고 수백억원을 빼돌린 것도 문제려니와 금융감독원 고위관리가 관리·감독권을 무기로 벤처기업의 주식을 터무니없는 헐값에 사취하고, 그 대가로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조장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해방이후부터 일본의 앞잡이들이 주름을 잡기 시작해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행위가 끊일 날이 없었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행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료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게 하거나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학산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2000년 들어 생물산업 육성이니 Bio기술 개발이니 하면서 기술개발 또는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바이오펀드를 조성하는데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생물산업이나 화학산업 관련기업들은 정부지원을 크게 바라지도 않건만 산업자원부가 앞장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물론 바이오펀드의 출자규모 자체가 정부 100억원 및 창업투자 또는 민간 200억원 등 300억원에 불과해 중소기업청의 일반펀드 5000억원(정부 1000억원 및 창업투자 또는 민간 4000억원)나 정보통신펀드 1508억원(정부 450억원 및 창업투자 또는 민간 1058억원)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세금을 여과장치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Bio정책 관계자가 관련 벤처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직접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벤처게이트」에이어「바이오게이트」가발생하지않도록처신을똑바로해야할것이다.

<화학저널 2000/11/06>